내년도 지방교대 정원 늘린다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3학년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대 정원을 20%까지 늘리고 공급 과잉인 사범대의 정원을 줄이거나 일반 학과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여 명을 교육대에서 2년간 교육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부터 실시 중이고, 편입학 규모가 늘어난 상태여서 교육대 정원까지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30일 '2003학년도 교대 및 사범계 대학 정원조정 계획'을 마련해 7월 20일까지 대학별로 조정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경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의 학생 수용 시설과 교수인력 활용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리고, 사범대는 교원 임용률이 낮은 학과와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학과는 정원을 줄이거나 일반 학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 정원 상당 기간 동결

고교 졸업생의 감소 추세로 인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 모집난을 덜기 위해 앞으로 상당 기간 대입 정원의 증원이 억제되고 대학 설립 기준도 강화된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3~5년 동안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내에서 미리 전공을 정해 신입생을 뽑는 전공예약제가 허용된다.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월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계 전국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제 대학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앞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감소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수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상당 기간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하고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국가 전략분야 등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하겠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자율책정 기준과 대학 설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앞으로 3~5년 동안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5학년도에 도입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 법률, 언론, 정보통신, 금융 분야의 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하겠다"며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해 산·학·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2년 이상인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 규정을 2년 이내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 입시부터 전공예약제 도입

기초학문 고사와 획일적 적용 등을 이유로 대학들로부터 반발을 사 온 학부제가 2003학년도 입시부터 5년 동안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4일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3~5년간 대학이 희망할 경우 모집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공예약제는 정시모집이 아닌 수시모집을 통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각 대학들에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그동안의 방침을 대폭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공예약제란 인문대학, 공과대학 등 단과대학별로 지원한 후 2~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과 달리, 수험생들이 지원할 때 원하는 전공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학과별 모집과 비슷하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학생들이 인기학과로만 몰리는 바람에 기초학문이 설 땅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특히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 총장)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운영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사기업 근무 국립대 교수 3년까지 휴직 인정

정부는 산학(産學)간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 교수들이 민간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 9일 '국립대학 지원방향'을 발표, "국립대 교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경우 그동안 유학과 국제기구 파견 등의 사유에만 휴직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정당한 휴직 사유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국립대 교수들이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 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본고사식 논술·면접 책임 묻는다

일부 대학들이 심층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난해한 영문독해나 수학문제 등을 출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금지한 대학 지필 본고사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일부 대학들의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특기 적성과 학교장의 추천에 따른 선발이라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며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면 입시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1학기 수시모집이 종료되는 대로 본고사 형태로 전형을 실시한 대학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진출 외국대학원 대폭 특례

빠르면 내년부터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학교 부지나 교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만 해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두 대학에서 2개의 학위증이 따로 나오는 '복수학위'뿐 아니라 두 대학에서 1개의 학위증을 함께 수여하는 '공동학위'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7월 15일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국내외 대학간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외국 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질 낮은 해외 교육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대학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학원에만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우수 대학원 유치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교 설립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공계 사기진작책 마련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7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과 1단계 국가과학기술지도 등 10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공계 대학진학 기피 현상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현상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70%선인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구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의 수혜 범위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전문 연구 요원 전직 제한규정 완화,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합 대학원 대학을 설립해 연구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매년 3,600만원의 연금과 1억 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현직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교생 수 2년 연속 크게 줄어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7%로 외환위기 전인 '95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1년 동안 고교는 5.8명, 중학교는 0.6명, 초등학교는 0.7명이 줄었다. ▲통계-체감 취업난 차이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02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24만 4,852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와 군입대자를 뺀 21만 3,189명의 60.7%인 12만 9,414명이 취업했다. 이는 지난해 56.7%보다 4%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외환위기 전인 '95년의 60.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교생 계속 감소 : 초·중·고 및 대학 학생 수는 '80년 1천만 명을 돌파한 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만 990명이 많은 1,195만 7,38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교생은 △2000년 207만 1,468명 △2001년 191만 1,173명 △2002년 179만 5,509명 등 2년 연속 16만여 명과 11만여 명이 줄었다. 대학생은 4년제대가 177만 1,738명, 전문대가 96만 3,129명으로 각각 42,100명과 10,480명이 늘었다. ▲여교원 비율 증가 : 여교원은 2000년 50%를 넘어선 뒤 2001년 51.9%에 이어 올해는 52.2%인 23만 6,137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68.2%, 중학교 59.7%, 고교 35.2%, 전문대 24.5%, 대학 14.5% 등이었다.

산업대 졸업자도 교사자격 취득

국회 교육위는 7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 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중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초·중등교육법 :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

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고등교육법 : 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해 해임규정이 신설됐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대학이 직접 기업 운영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고 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별로 산학 협력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15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 기업(컴퓨터 관련 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 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 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5년제 학부생 입영 연기 25살까지

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과대학 건축학부 등 학부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늘어나는 경우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기존 24살에서 25살로 연장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원처럼 28살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에 수의과 대학원 과정을 추가했으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연장할 수